

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98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21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김문수 · 이성운  
정동영 · 김동아 · 박지원  
양부남 · 이개호 · 소병훈  
김현정 · 문정복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금지로 국회 탄핵소추권의 취지를 제대로 확립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 대상자의 사직 접수와 해임이 금지됩니다. 의결 직전 사퇴와 해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· 김홍일은 「헌법」,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방송법」, 「방송문화진흥회법」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의결 직전 사퇴했습니다.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사퇴합니다. 이는 「헌법」이 규정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.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.

이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,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,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.

「헌법」이 부여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130조제4항 신설 및 제134조제2항).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, 통보를 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.

제134조제2항 중 “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”를 “정지된다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탄핵소추 발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130조제4항 및 제1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130조(탄핵소추의 발의) ① ~ ③ (생   략) <u>&lt;신   설&gt;</u>	제130조(탄핵소추의 발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</u> <u>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</u> <u>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</u> <u>의 장에게 통보하고, 통보를 받</u> <u>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</u> <u>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</u> <u>자를 해임할 수 없다.</u>
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 과) ① (생   략)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 사는 <u>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</u> <u>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</u> <u>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</u> <u>없다.</u>	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 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 <u>정지된다.</u>